

한국금융학회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토론자료

2014. 4.10.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권영종

I. '기축법 상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및 회생절차 개선방안 모색'에 대한 검토의견

1. 워크아웃은 기업 및 채권금융기관 양자에게 가능한 선택을 제시하는 것

- 만약 채무자가 양 제도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양제도가 서로 보완하는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업에게 선택권이 없다고 할 수 있다.(p.41)
- 채무자로서는 사실상 주채권은행의 통보를 받고 워크아웃절차로 진행하는 것을 거절하기가 어려우므로 채무자에게 진정한 신청권한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가능(p.17)
- 채권자만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것은 문제(p.33)

→ 워크아웃은 '기업의 사업구조조정 및 자구노력 등을 조건'으로 '채권단이 신규자금 지원 및 채권재조정의 제공 등을 제시'하여, 양자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추진에 합의할 때만 추진될 수 있는 것

- 채권단의 제안을 기업이 받아들여 상호간에 약정 또는 소위 MOU를 체결하여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만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전담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일 수 없음
- 기업은 언제라도 워크아웃을 통한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회생절차를 신청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채권단 또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에는 언제라도 워크아웃을 중단할 수 있음

→ 채무자가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양 제도가 상호보완적인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확한 인식이라고 봄

- 실제 적지 않은 경우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자발적으로 회생절차를 선택하고 있는바, 최근 3년간 신용위험평가결과 워크아웃대상으로 판정된 기업중 10% 정도가 회생절차를 선택하였으며,

- 그보다 많은 수의 기업이 **워크아웃 신청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생존을 선택**하고 있는 점에서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채권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영정상화를 통한 채권회수보다는 자산매각을 통한 채권회수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그로 인해 기업의 재건과 채권회수의 극대화라는 기업구조조정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음(p.32)

→ 채권단입장에서 워크아웃의 기본 목적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채권의 회수를 제고**임

-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자산매각은 있을 수 없으며, **기업과의 합의없이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도 없음**
 - 금융위기 이후 워크아웃을 진행하다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과다 또는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 등으로 인해 워크아웃을 중단한 일부 건설사들이, 채권단이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은 도외시하고 **자산매각을 통한 채권 회수에만 골몰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 이는 최근 동부그룹이나 현대그룹 등 누가 보아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들이 헐값 매각 등을 사유로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동양그룹과 같이 **자구노력을 지연하다 도산에 이른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그 비논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
 - 채권단으로부터 상환유예 및 금리재조정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당장의 생존이 불투명한 기업이 미래의 사업기회를 위해 부동산 등 자산을, 적정 수준을 넘어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과거 도산에 이르렀던 많은 기업들이 저질렀던 오류의 반복에 다름 아닌 것
- 2009년 하반기 워크아웃 초기에 회생절차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H사의 경우
 - 건설경기 회복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단기간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미분양 물량을 할인매각하는 등의 **유동성 확보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 워크아웃 시작 초기부터 **대규모로 만기도래한 할인어음**으로 인하여 채권단이 긴급 신규자금 지원 이후 추가적인 신규자금 지원을 거절함으로써 **부도발생 및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음

2. DIP 파이낸싱이 부진한 이유(p.47)

- 워크아웃에서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규자금 회수 관련 상환을 위한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나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에 의한 제약이 있어 신규자금 대출에 소극적
- 금융기관의 경직된 대출기준 및 위험회피 관행, 법원 회생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비협조
- 회생절차에서도 신규자금 지원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지만 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 및 법원에 대한 불신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DIP 파이낸싱은 **고위험-고수익 기업대출**로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사업모델이 아니며**, 워크아웃에서의 신규자금 지원은 자산운용 수단으로서의 선택이 아니라 경영정상화를 통해 **기존 채권의 회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되는 것임

- DIP 파이낸싱이 2~30%에 달하는 고금리로 운용된다고 하는바, **워크아웃 신규자금은 통상 5% 내외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음**

- 워크아웃 신규자금은 개별 금융기관이 만기도래시 임의로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고, 채권단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여유자금 발생시 만기 이전에라도 안분비례하여 회수하거나 경영정상화 달성시까지 만기를 계속 연장하게 됨

- 오히려 DIP 파이낸싱의 경우 **만기도래시 강제적인 회수에 착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DIP파이낸싱이 워크아웃 신규자금보다 회수가 용이하다 보아야 할 것임**

→ 제도권 금융기관의 고위험 기업여신 취급을 건전성 감독측면에서 금융당국이 용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금융기관들도 고위험 여신 취급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고위험 투자를 대상 업무영역으로 인식하지도 않고 있음**

- 따라서 이를 금융기관의 회생절차에 대한 비협조로 인식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움

- 아울러 K은행의 경우 **내규상 정상적으로 부리할 수 있는 상한이 13%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부여가 필요한 **DIP 파이낸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바, 이는 모든 은행에서 동일할 것으로 보임
- DIP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위험-고수익 투자역량을 갖춘 투자주체를 양성해내어야 할 것인바, 이는 M&A나 PEF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 만큼이나 **지난한 과제**임
- DIP 파이낸싱이 부진한 것은 **우리 경제의 역량 또는 금융산업의 깊이와 폭에 의한 근본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금융기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한 문제인식이라고 보기 어려움

3.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협약 추진배경(p.14)

☐ 법원이 주재하는 도산절차에 대하여 불신하고 있었던 경제관료들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을 원했다.

→ 비교대상을 도산절차보다는 **외환위기 이전 구제금융**으로 삼아야 함

- 정치적 판단 등 **경제외적 기준에 따라 구제금융 여부 및 규모를 결정**하던 구체제와 작별하고 **채권단이 경제적인 판단에 따라 워크아웃 개시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
- 만일 당시 워크아웃을 추진했던 모든 기업들이 도산절차에 돌입했다면, **집단 연쇄 부도사태가 불가피**했을 것인바, 그 경우 우리경제가 실제 경험했던 **급격한 턴어라운드**는 불가능했을 것이 명백함

4.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중단(p.28)

☐ 비협약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워크아웃절차의 한계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 채권단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비협약채권자 또는 비협약채권자에 대한 설득 실패는 당연히 워크아웃 추진에 있어서 한계일 수밖에 없으며,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기축법이 모든 채권자를 포괄하지 않는데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trade-off**이라 할 것임

- 워크아웃에서 비협약채권자의 존재는 불가피하게 주어진 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채권단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비협약채권자를 관리할 수 있을 때에만 워크아웃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임**
- 비협약채권자의 규모에 따라 정상결제하거나 채권행사 유예에 동참시키거나 또는 채권단보다 낮은 강도의 손실을 분담케 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 최단 시간내에 완료되어야만 함
- 쌍용건설의 경우 채권단이 워크아웃 개시단계에 군인공제회를 설득하여 회소한 채권행사 유예는 확보하였어야 하나 이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규자금 지원을 강행함으로써 군인공제회를 설득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임
- 다만 쌍용건설의 워크아웃 실패가 회생절차의 진행에 결정적인 정도의 악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보이며, 채권단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시도해보았던 것이라 할 수 있음

5. 개별기업에 대한 채권단 자율협약(p.5)

□ 채권단 100%의 동의 필요

- 개별기업에 대하여 **최초 자율협약을 체결할 때는 참여 채권금융기관 100%**로부터 기축법 등을 적용하여 구조조정을 개시 및 진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획득
- 이후 동 자율협약에 근거한 채권재조정 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기축법의 조항에 따라 3/4 동의로 의사결정**
 - 따라서 ‘늘’ 채권단의 의견합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실효성 측면에서 단점이 있는 것은 아님

- 다만 이 경우 참여 금융기관의 범위가 대개 은행권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어 참여 금융기관의 희생이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에 비해 더 커지게 되고, 해당 기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축소됨**으로써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 또한 참여자간 이견 발생시 기촉법에 의한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거나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례가 빈번

6. MOU(p.9)

-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는 대출금 상환이 없고 만기에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함
- 모든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하고 계속기업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임
- 워크아웃 졸업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안건에 잔존 채권의 만기를 어떻게 운용할 지를 포함함으로써 기업이 정상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지원
- 통상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상환유예**한 후, 기업이 경영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만기를 다양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기업의 경영이 정상화되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채권재조정 등을 통해 새로운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 추진(유예기간도 새로 설정)

7. DIP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판(p.22)

- DIP에 대한 금융기관의 비판은 DIP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 보다는, 동 제도로 인하여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통한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회생절차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웅진의 경우 회생절차를 통한 구조조정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렇게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함

II.기축법의 역할

□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면 기축법이 그 목적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 기축법의 목적

- 기축법 제1조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각 기축법안상 제안이유

- 2001. 6. 제정안

-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규칙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립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

- 2007. 7. 제2차 기축법

-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여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것임.

- 2011. 4. 제3차 기축법

-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향후 경제의 잠재 불안 요인에 대비하고 시장자율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관행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려는 것임.

○ 2013.12. 제4차 기촉법

- 취약업종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금년 말에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향후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구조조정 수요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2007년 제2차 기촉법이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기촉법 재입법 사유로 들고 있으며

- 2011년 제3차 기촉법도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기촉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시장자율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관행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2001년 기촉법 제정당시에는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삼고 있으며
- 현행 제4차 기촉법도 ‘기업구조조정 수요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제안이유로 기술함으로써
- 2, 3차 기촉법과 같이 기업구조조정 경험이 축적될 경우 기촉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지 않음

□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산업구조의 변화 및 기업의 자체경쟁력 저하 등으로 **구조조정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음**

- 제2차 및 제3차 기축법의 입법과정에 마치 **일정기간 워크아웃 경험이 축적되고 나면 기축법에 의한 뒷받침이 없더라도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기술한 것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아무리 많은 구조조정 경험이 축적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채권금융기관이 당면한 구조조정 사안에 대하여 금융기관 전체 또는 국민경제 전체적 관점을 견지하여 **극단적인 개별 이익 추구행위를 포기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 따라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존재하는 한 채권금융기관들이 **개별적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전체적인 채권단의 이익을 해하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함**

□ 한편,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제기된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란

- 회계 및 공시시스템의 정비, 사외이사제도 등 경영감시장치의 장착 등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시장에 의해 조기에 공유될** 것이므로 해당기업과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경제적 판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할 수 있음
- 그리고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은 시장규율이 강화되면 외환위기 이전과 같이 기업의 부실 또는 구조조정 필요성이 장기간 은폐·누적되지 않고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 시장참여자에게 공유됨으로써,
 -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밀린 과제를 한꺼번에 해치우는 것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기업생태계의 자연적인 순환과정의 일환으로 **수시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 할 수 있음

- 상거래 하청업체까지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지 않고는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불가피할 것**이나,
 - **채권금융기관의 회생만으로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수준의 기업**에 대해서 까지 굳이 회생절차를 통해 상거래 하청업체 등에게까지 회생을 요구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것이며,
 - **이 단계에서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 회생절차 돌입 이전 단계에 시장기능에 의해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감지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

< 붙임 >

참고자료

□ 기촉법 제정안 제안이유(2001. 6. 강운태의원 대표발의)

-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채권단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시장규칙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립하는 한편,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있어 겪고 있는 법률상 제약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임.

□ 제2차 기촉법 제안이유

- 2005.12. 김종률의원 대표발의(2007. 6. 폐기)
 - 현행 법률의 효력 만료시한(2005년 12월 31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여 이를 보완해 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며, 향후에도 대기업의 부실 발생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 법의 효력시한을 연장하는 것이 절실한 형편임.

따라서 이 법의 유효기한을 향후 5년간 연장함으로써 투명하고 명확한 시장 관행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출자전환주식의 매각 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동 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007. 7. 재정경제위원회

-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적용하여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의 관행이 시장에 정착되지 않고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하려는 것임.

□ 제3차 기촉법

○ 2010.10. 김용태의원 대표발의(2011. 4. 폐기)

- 아직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향후 대내외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에 대비하는 한편,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 관행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촉진함으로써 상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011. 4. 정무위원회

- 시장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 및 소액채권금융기관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다시 제정함으로써 향후 경제의 잠재 불안 요인에 대비하고 시장자율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관행을 조속히 정착시켜 나가려는 것임.

□ 제4차 기촉법

○ 2013. 7. 김종훈의원 대표발의(2013.12. 폐기)

- 취약업종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금년 말에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기업 구조조정 수요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2013.12. 정무위원회

- 취약업종 중심으로 워크아웃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금년 말에 법률 효력이 상실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어려워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향후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 구조조정 수요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경제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함.